

종전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추진

청와대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중동정세 점검·대응조치 등 논의 휴전기간 에너지 물량 확보 총력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



전은수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대응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에서 첫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종전 조건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진 상황이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12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정세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경제수석비서관·재정기획보좌관·성장

경제비서관·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날(1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계획, 중동 사태 여파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상황을 점검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면서도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휴전, 후후 종전이 성립해도 물류, 운송 정상화,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됐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명확한 종전선언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은 지속되며, 공급망과 물가관리

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한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 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약 10만3900원)에 비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차 석유파동이나 리비아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전쟁으로 인해 원유 생산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은 "2주의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즉시 유조선 투입해야 한다.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고, 나

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승용차 이용 수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며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산업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에 비비추 추가 투입하여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이창용 "중동사태로 인한 공급충격 대응"

(한국은행 총재)

한은 기준금리 동결

지속성·파급경로 따라 정책 판단 "경제변수 심화... 좀 더 지켜봐야"

"단순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전쟁의 전개와 그 파급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연 2.50%) 동결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중동전쟁 충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기까지 짓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단순 관망이 아니라 공급충격의 지속성과 파급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공급충격 원칙 깨면 한은

이창용 총재는 이번 충격에 대한 통화정책의 원칙부터 분명히 했다.

그는 "공급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며 "충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그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금리를 움직일 타이밍이라기보다, 중동사태가 단기 충격에 그칠지 장기 충격으로 번질지를 더 확인해야 하는 국면이란 설명이다.

실제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상당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동시에 커진 상황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 상황을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도 구분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억눌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이어서 전쟁 충격이 경기를 꺾기보다는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고, 그에 따라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압력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부문 간 회복 격차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이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창용 총재는 "이번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인상, 인하에 관한 논의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간은 중동에서 오는 뉴스에 따라 경제변수가 너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금리 인상·인하를 논하기보다 사태 전개를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는 설명이다.

◆ 환율·주택도 여전한 변수

이번 동결의 또 다른 축은 금융안정이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을 두고 "단순히 1200원, 1500원 같은 절대 수준만 볼 것이 아니라 달러인덱스(DXY) 대비 원화가 얼마나 더 절하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원·달러 환율이 달러인덱스와 무관하게 1480원까지 급등했을 때는 국내 요인, 특히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급증이 주요 배경이었지만, 올해 2~3월 이후에는 중동사태와 외국인 주식 매도가 더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 매각액이 478억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3월에만 298억달러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된다는 시각에는 거리를 뒀다. 고령화나 저성장만으로 환율이 반드시 절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주택시장도 안심 단계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 특히 15억원 이상 대출이 어려운 고가주택 쪽은 안정세가 약간 보이기 시작했지만, 수도권 주변 부동산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국면"이라며 "완전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자산 수익률을 계속 뛰어넘는 구조가 이어지면 양극화와 자본 배분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제한 등 단기 불평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고쳐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는 20일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112조 '스페이스X' 투자 길 열리나 금융당국, 한미 동시공모 법률 검토

미래에셋, 공모주 개인 배정 추진 국내 청약절차·투자자 보호 등 과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이 미국과 한국 동시공모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성사될 경우 글로벌 초대형 IPO에 국내 투자자가 공모 단계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파장과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공모 체계가 크게 다른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국내 공모 절차 추진 의사와 관련해 초기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과 스페이스X 공모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는 상태"라며 "어떤 단계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IPO 시스템 차이가 있어 두 체계를 연결하고 맞출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최대 750억달러(약 11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는 20여개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약 50억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의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가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관투자자나 사모펀드 이외에 국내 개인 투자자도 '세기의 빅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해외 공모주를 국내에서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배정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IPO 규정도 상이하다. 미국 IPO는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예측을 통해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인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페이스X의 6월 상장이 접쳐지는 가운데 적어도 국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까지 최소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도 빠듯하다는 평가다.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공시 범위와 정보 제공 수준 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주식이라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경우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효력 발생 기간이나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가능한 구조 인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모 자금이 단기간 해외로 이동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당국이 따져볼 변수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국과 국내 동시공모를 시도하는 첫 사례라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배정 물량이 구체화하는 대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